

한 체제는 갖추어졌지만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설계교육지원센터의 설립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학교육 연구비의 지원으로 교수의 공학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고급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석사 졸업생의 증원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명예교수 김 경 동

이미 10개 성상(星霜)도 훨씬 더 지난 시절의 이야기다. 1994년 초, KBS의 신년 특별대담 프로그램 녹화를 위해 하버드(Harvard) 대학의 다니엘 벨(Daniel Bell) 교수와 대화를 나눈 때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승승장구 경제가 뻗어나가던 중이었다.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자연스레 21세기를 바라보는 세계의 변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 대담에서 내가 맨 먼저 꺼낸 질문은 21세기 신문명의 중심에 관한 것이었다. 토인비를 비롯하여 사회학자와 문명 비평가들이 문명의 진앙(震央, epicenter)이 동(東) 쪽에서 서(西) 쪽으로 이동하는 역사적 추세를 들어 21세기에는 아시아로 옮겨 갈 것이라는 예측들을 내어 놓은 것을 언급하면서, 벨 교수의 견해를 물었다. 그의 대답은 주저 없는 “Maybe but No!” 였다.

그는 문명을 구성하는 주요소로 경제, 기술, 민주주의, 세 가지를 들었다. 벨 교수는 주저 없이 경제력에서 동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아직 아시아권이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사실 이 과제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님은 다 아는 일이다. 가령 일본이나 인도가 아시아에서는 비교적 일찍이 민주주의적 이행(democratic transition)을 성취한 나라들이지만, 이들이 과연 진정으로 민주적인 정치문화와 사회적 생활세계(生活世界)의 민주화를 온전히 누리는지 묻는다면 대답은 그다지 긍정적인 편이 못된다. 하물며, 기타 아시아 국가의 민주화 정도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민주화란 단순히 자유로운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만 이룩하면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식과 행위를 규정하는 민주적 문화의 정착이 관건이다. 따라서 아시아가 새로운 문명의 진원지로서 자격을 갖추는데는 상당한 장애가 놓여 있다는 말이다.

다음은 기술이다. 동아시아의 ‘용호’(龍虎)들이 서방의 기술을 도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제

품생산에 응용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성공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 가지 근본적인 약점을 놓치지 않았다. 기술혁신을 가능케 하는 ‘이론적 지식’ (theoretical knowledge)의 개발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을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 이유는 이론적 지식은 연구에서 창출하는 것이고 이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틀의 기본은 대학원 교육인데, 미국을 제외하면 아직은 어느 나라도 이처럼 고도의 추상적인 이론적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연구가 가능한 수준의 대학원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바로 이 점에서 동아시아가 미국과 경쟁하여 새로운 문명의 진앙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주장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노벨과학상이 하나의 지표라면 역대 수상자들이 연구를 하는 여건은 쉽사리 간과할 수 없는 특징을 보인다. 이제는 한 개인의 연구실에서 새로운 이론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과학자를 중심으로 모여든 거대한 과학자 집단의 집합적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 다수의 대학원 학생이 동참하며 이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엄청난 경비가 뒷받침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근자에는 중국이 새로이 생성한 경제력을 동원하여 재미 과학자들을 유인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시작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어쩌면 벨 교수의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腦裏)를 스쳤다. 적어도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인류문명사에서 획기적인 발명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쏟아내어 놓은 나라는 다름 아닌 중국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에서는 서방(西方)의 과학기술 발전사와 달리 지난날의 발명이 이론적 지식의 근거를 결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누적적(累積的)이고 연속적인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혹시 알 수 없다는 미심쩍음은 여전히 남는다.

우리나라는 과연 이 맥락에서 어떤 위치에 설 수 있을 지를 생각하면서 떠올린 생각이다. 결국은 교육이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벨 교수의 지적은 피해 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는 지 2~3년이 흐르고 나서 나는 아주 우연히 재미있는 교육 이야기를 들었다. 1990년대 중후반 두 차례 듀크(Duke) 대학에서 한 학기씩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 한국사회의 발전과 변동에 관한 강의였다. 어느날 지인(知人)의 제자라는 여성으로부터 만찬에 초대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그녀의 남편이 들려 준 얘기다. 나는 이 일화를 강연이나 산문에서 즐겨 자주 언급한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는 MIT 대학원에 입학하여 첫 학기 시험을 치렀다. 성적은 물론 A+였다. 좋아서 날아 갈 것 같은 기분인데 담당 교수가 연구실로 불렀다. 답안이 너무나도 완벽해서 최고 점수를 주지 않을 수 없다는 칭찬이 듣기 좋았다. 그러나 다음부터 이런 식 답안을 쓰면 낙제점밖에 줄 수 없으니 주의하라는 충고가 따랐다. 처음 답안의 내용은 해당 분야의 모든 주요 이론과 연구성과를 깡그리 암기하여 빠짐없이 적어 낸 것이었으므로 일단 좋은 점수를 주기는 했으나, 이는 고등학생이나 할 일이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장차 연구와 교수를 할 사람이 쓸 시험답안이 아니라고 했다.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의 편린(片鱗)조차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는 박사학위를 마친 뒤 유명 연구소를 거쳐 이제는 벤처기업을 일구어 크게 성공하게 되었다.

나는 교육을 바퀴 둘 달린 짐수레에다 비유하곤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초등학교, 아니 유아 교육부터 수레의 짐칸에 짐이 너무 많이 실려 수레가 뒤뚱거릴 지경에 이르렀지만 정작 굴러가야 할 바퀴 둘은 망가져 움직이지 못하는 형국이란 말이다. 온통 머릿속에는 암기해서 축적한 정보가 가득 차 있지만 시험만 치르고 나면 그런 정보 자체는 쓸모없는 것이다. 정보가 유용한 지식이 되려면 인생에 무언가 유익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 그것도 단순한 실용적 지식보다는 삶의 지혜라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수레에 실린 정보라도 우선 수레가 움직여 준다면 그나마 쓸모가 있을 법도 한데, 이 수레는 바퀴에 탈이 나서 꼼짝도 못한다. 한 바퀴는 창의력 교육이고 또 한 바퀴는 사회성·도덕성 교육이다.

하루는 TV의 뉴스 해설 시간이었나, 하여간 어머니가 젓먹이 아기를 유아용 높은 식탁에 앉혀 놓고 이유식을 먹이는 모습에 접하였다. 그런데 아기의 앞에는 커다란 책이 펼쳐져 있었고 어머니는 이유식 한 술을 떠먹일 때마다 손으로 커다란 책을 가리키며 영어로 ‘엘레펀트’(elephant)라고 외쳤다. 이런 행동을 되풀이 하는 젊은 어머니는 지금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기에게 조기 영어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이 엄마의 교육열을 누가 막을 수 있으며 어찌 탓하랴마는, 그 아기가 참으로 불쌍하다 싶었다. 그저 무엇을 못 가르쳐서 안달을 하는 어머니들의 열정이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지옥’으로 내몰고 있음이다. 그 시간에 엄마는 아기와 놀아 주고 동화를 들려주고 이웃의 다른 아기들과 놀게 해줄 수는 없었을까? 방과 후 학원에서 보충수업을 듣고 그도 모자라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발레, 무엇이든 남이 하는 거면 다 하고서야 밤중에 파김치가 되어 귀가하는 우리의 청소년 학동들은 그렇게 불쌍한 존재들이다. 다른 친구들과 놀 틈도 빼앗겨 버린 박제인간이다.

여기서 우리는 수레에 가득 넘치는 정보에 시달려야 하는 우리의 젊은 세대를 보며, 거기서 우리는 창의력과 사회성·도덕성 교육의 공백을 읽는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면 그때부터 해방이다. 적당히 놀며 학점이나 잘 따면 졸업은 따 놓은 당상이다. 대학 졸업을 하고도 취업이 어려운 것은 쓸 데 없는 것을 잔뜩 배운 탓도 있지만 정작 배워야 할 것을 놓쳤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자세로 삶에 임해야 할지를 올바르게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게다. 대학교수는 전문지식 주입에 열중하고 창의력, 사회성·도덕성 교육에는 관심도 없고 소양도 별로다. 한 세대 전의 얘기지만 실업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현장연구를 하던 중 서울의 우수한 대학 출신보다는 실업고등학교 졸업생이 더 훌륭한 종업원이라는 인사관리자의 말을 들은 기억이 아직도 살아 있다. 웬만한 직업적 정보는 대학 교육이 아니어도 현장에서 습득 가능하다고 했다. 직장에서 더 중요한 요소는 일에 임하는 자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맺는 관계와 그리고 특히 창의력이라는 것이었다. 창의교육, 사회성·도덕성 교육으로 귀착하는 연유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요 수출 품목의 핵심 부품이나 생산품의 기본 주형(鑄型)의 상당수를 일본과 구미지역에서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로열티가 수출·수입의 큰 몫을 값어 먹고 있는 나라다. 우선 핵심 기술력과 디자인에서 뒤지기 때문이고, 다음은 제품의 마지막

손질(final touch)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창의력에서 밀린다는 말이고, 또 물건을 만드는 데 투입해야 마땅한 정성과 직업의식이 모자란다는 말이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에서 우리나라 종업원들이 자존심만 앞서지 진정한 직업인으로서 서비스 정신의 발휘에서 부족한 것도 사회성 교육의 공백 탓이라 할만하다. 우리처럼 교육열이 강해 평균 학력이 세계에서 제일가는 나라에서 일상의 기본질서 지키기가 그리도 어려운 것 또한 일찍부터 지식교육만 치중하지 사회성·도덕성 교육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한 때문일 게다.

모든 보통교육이 대학 입학으로 지향하고 있는 데서 문제의 발단이 생겼다면 대학에 다니고도 쓸모없는 인간을 양산하는 우리의 교육은 과연 무슨 존재 이유를 내밀 것인가? 대학 입학에 목매는 부모들과 그로 인해 고통 받는 학동세대를 생각해서 내어 놓은 대책이 평준화였다. 시험 준비로 젊음을 허비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제비를 뽑아 취학하도록 한 것이 평준화다. 이름이 번드르르하지 평준화는 잘못된 표현이고 실지로는 그냥 거주지역 내 등교제도였다. 거주지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교는 다시 서열이 생겼다. 평준화는 실패작이 되고 말았다. 그런 평준화 아닌 평준화를 놓치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교원이나 학부모는 자기네의 위선적인 이중성을 의식조차 하지 못한다. 학업 수준별, 또는 수업능력별 학급 편성에 의해 이동수업을 받을 수 있는 유연하고 교육적인 제도를 반대하는 교원과 학부모가 그들이다. 평준화라는 미명이 그들의 가소로운 명분이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선별과정이다. 학습능력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화하고 수준에 맞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모두에게 학력 향상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는 것이 정당한 교육의 목표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 학업열의에 따라 성취가 달라지면 그만큼 차별적인 평가를 내리고 상벌이 주어지는 것이 교육의 기능이다. 수월성을 추구하되 각자 수준에 맞게 그 목표를 지향하는 경쟁의 원리를 배제하면 교육은 죽는다.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고 우기는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사고는 교육을 뿌리부터 망가뜨리는 원천이다. 경쟁을 하되, 동등한 기회구조 속에서 공정한 룰(rule, 규칙)에 의해 추구하는 것이 옳지, 처음부터 경쟁을 차단하는 교육은 왜곡을 면치 못한다. 다만 사회정의라는 가치기준에서 처음부터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집단과 계층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경쟁은 경쟁이다. 기회 균등의 가치를 위해 수월성 추구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을 망각하는 처사다.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도 경쟁해야 한다.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원의 경쟁은 치열해야 한다.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과는 학생의 학업능력 향상 여부로 판가를 난다. 교사도 이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평가의 방법이다. 보통교육 수준에서는 일차적으로 학생의 학업 결과가 평가의 기준이다. 학교 내의 감독 교사와 동료 교원이 평가에 참여할 것이다.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은 원칙적으로 교사를 '평가' 할 능력도 자격도 갖추지 못한 집단이므로 평가라는 말은 벌써 어휘상으로 잘못이다. 학생의 의견 조사가 적절한 표현이다. 동시에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하는 것도 삼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원칙은 대학교수의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학생들은 교수의 평가자가 아니고 평가는 전문가 집단의 몫이다.

경험담 한 가지를 더 소개한다. 1970년대 미국 대학에서 가르칠 때 해마다 연말이면 자기평가서 혹은 자기업적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분주했던 기억이 새롭다. 강의, 연구, 교내 봉사활동, 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스스로 마련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질문서를 구성하는 위원회에도 참여하여 조사표를 직접 작성하기도 했다. 이런 모든 내용에 덧붙여 학과장과 학장이 동료 교수들의 의견도 참작하여 종합적 평가를 한 데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연봉 조정, 승진, 종신재직(tenure) 여부 등의 결정에 임하였다.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을 덧붙인다. 당시는 미국의 경제사정이 매우 불리하여 대학 교수 자리가 많지 않았던 때지만 운 좋게 내가 근무하던 대학 사회학과에서는 6명의 신규 채용이 있었고 내가 그 중 유일한 유색인종이었다. 그로부터 5년 후 부교수 승진과 테뉴어를 위한 평가에서 나와 또 한 명의 백인 교수만 부교수 승진과 동시에 테뉴어를 받았고 나머지 네 사람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학교를 떠났던 것이다. 물론 나는 소수민족으로 살아남기 위해 연구와 강의에 죽을 힘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원과 교수의 업적과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결과는 반드시 차별적인 대우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지금까지는 사회주의적 평균주의 혹은 평준화지향에 빠져서 온갖 미명의 명분을 내걸고 평가받기를 거부해 왔던 게 사실이다. 이제 시대는 바뀌고 있다. 어떤 핑계를 대고서도 평가를 피하려는 이중성은 구시대적 사고의 산물이다. 당당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아 떳떳하게 보상과 대우를 받는 것이 도리다. 물론 평가는 공정성이 핵이다. 여기서도 우리 사회의 불신의 씨앗이 엿보인다. 평가자를 믿지 못하는 게다. 인정에 끌리고 연고에 매이고 청탁과 '인정'(人情)에 발목 잡혀 불공정한 평가를 일삼아 온 우리다. 참고로 여기서 '인정'이라 따옴표를 쓴 까닭은 이런 맥락에서 쓰는 이 말의 뜻에는 '뇌물'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인정에 너무도 약하며, 진짜 인정사정 다 봐주어야 하는 우리네 인정주의(Personalism) 때문에 합리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따라서 불신이 팽배해진 것이다. 교육에서 인정은 학습능력에 맞게 인간적으로 충분히 감정이입(感情移入, empathy)을 경험하게 하고 헌신적으로 학습자를 양육하겠다는 따뜻한 손길을 요하는 것이지, 누구나 실력과는 상관없이 평가를 잘 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관행과 자세에서도 우리는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평준화 의식의 발로를 엿보게 된다. 사회주의적 평준화가 경제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사회의 활력 자체를 억제하여 체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을 20세기 역사에서 확연히 보았음에도 우리에게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되지 못하였다.

여기에 국가의 규제라는 엄청난 장애가 교육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또 다른 병폐가 바로 국가의 일방적 통제와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다. 물론 국가가 교육에 개입하는 배경에는 학교 운영 주체를 불신하는 신뢰 결여의 문제가 도사린다.

입학 관리에서 비롯하여 학생 정원이나 등록금 등 교육비 책정, 교과과정 운용, 졸업 관리, 교원의 임용, 평가, 승진, 포상, 징계, 퇴임 등 모든 교육의 과정에서 주체가 정상을 벗어나는 관행으로 불신을 자초한 점은 시인할 수밖에 없는 과거를 업고 있다. 그렇더라도 국가의 손길은 이제 풀어야 할 때가 지났다. 규제와 감시의 손을 풀면 분명히 불미한 관행이 되살아나는 문제가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 시행착오의 시기를 잘 견뎌야 비로소 우리의 교육은 자가정화력(自家淨化力)과 자치(自治)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에 그토록 목을 매는가? 우리 사회가 워낙 지위(감투)와 권력만 있으면 온갖 특권을 차별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 보니, 지위-권력지향적 가치관이 팽배하게 되었다. 사회적 지위와 특권은 학벌이 좌우하는 사회니까, 고등교육에서는 유리한 지위 획득에 도움이 되는 분야의 전공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명망 있는 대학에 집중하는 성향이 강해졌다. 결국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지향하는 교육관이 굳게 자리 잡았고 보통교육은 대학 입학이 주목적인 것으로 전락하였다. 이 같은 구조적 악순환 속에서 우리의 어린 이는 사교육의 수렁에서 고통 받으며 인간교육의 상실이라는 깊은 병에 시달리고 우리의 경제는 사교육비의 짐으로 허덕이고 있다.

사교육만 해도 그렇다. 학교가 담당하는 공교육이 부실하다는 불신에서 유래한 관행이지만 이제는 공교육을 능가하는 위력을 발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도대체 ‘과외’라는 말의 용법부터가 잘못되었다. 본래 과외란 ‘교과과정 틀 밖에서 행하는 교육, 훈련 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을 뜻한다. 예능과 체능 실기, 컴퓨터 기능, 기타 교양인으로서 쌓고 싶은 소양의 습득 같은 것이 필요한 학동들에게 학교가 제공하려는 방과 후 교육활동이다. 학교에서 정식으로 수업을 받는 정규 교과목을 사설 학원이나 개인 강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과외가 아니고 사설 정규 과목 보충수업이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정규 과목은 학교에서만 가르치고, 사설 학원에서는 학교가 과외로 가르쳐야 하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제공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런데 현실은 사설 학원이나 개인 강사들이 정규 과목의 보충 수업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니 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그러한 사교육 번창의 이면에는 교원 수급과 보상체계의 근원적인 문제가 도사린다. 우선 교육은 가능하면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우수한 인력으로 충원하는 게 옳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도 다른 직종의 인재보다 열등해서는 곤란하다. 그러자면 교직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유인(誘因, incentives)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경제적 존경과 대우와 보상이다. 공교육의 교원이 사설 학원이나 개인 교습 강사보다 인기가 없는 까닭은 진정한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이러한 유인과 보상체계의 문제에 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우선 사교육의 필요성을 격감시킬 수 있다. 그리고 중등교육이 대학입학시험 지향으로 가는 한 사교육은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보통교육은 교육적인 관점에서만 시행하면 되고, 고등교육의 입학전형은 전적으로 대학 당사자들이 결정하고 선별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책임지는

것이 정석이다. 물론 지금까지는 불신에서 비롯한 온갖 전형의 규칙과 방법이 횡행하였으나 이제는 대학이 결과를 온전하게 책임지도록 자율성을 허용한다면 솔직히 문 닫아야 할 대학은 도태하게 하고 앞서가는 대학은 쑥쑥 자라도록 하는 것이 발전의 초석이 되는 원리다.

뉘뉘니해도, 궁극적으로 모든 교육의 뿌리는 가정교육으로 귀착한다. 부모, 특히 어머니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우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첩경은 어머니의 각성이다. 어머니의 재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사회의 관점에서는 직업별 특권의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노력이 따라야 한다. 그래야 개인은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하며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인성교육은 영원한 화두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명예교수 신 동 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예의를 숭상하는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려왔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말이 무색하도록 인성이 타락된 시대에 살고 있으니 이제라도 선비사상의 정신적 갑주로 무장해야 되겠다. 예전에는 명문 가정이 아니더라도 가정마다 가훈을 중시하고 명심보감이 될 글귀로써 귀감을 삼아 도의를 함양하며 보편적 가정교육의 지침을 삼았다. 요즘 가정교육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해 높은 점수만 따면 된다는 풍조와 국민윤리교육이 있지만 그 역할이 미흡하여 사회 병리 현상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여하튼 건전한 인성교육의 부재로 사회의 지도자까지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 개인의 불행은 물론이고 나라에도 큰 해악을 끼치는 일 이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러므로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데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사회 병리현상을 치유할 묘방과 묘책을 찾는 데는 인간 존재의 품격을 높이는 교육이 기본이다. 그래서 교양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도의교육과 국제사회의 일익을 맡을 인성교육은 대학의 몫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세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은 개인의 명예나 이기적인 출세가 아닌 건전한 인륜과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인간, 곧 진취적인 교양을 갖춘 인재로 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에서도 창의적 사고와 건전한 태도, 상식을 갖춘 제대로 된 인품을 기대하므로 대학교육에 있어 인성교육은 중요한 의무가 되고 있다.

2006년도 메가트렌드 코리아가 제시한 20대 메가트렌드 중 IT가 대신 할 수 없는 인간 능력의 가치 증가를 강조하였다. 이것은 금세기 산업화 사회가 추구하는 과학기술 못지않게 인성교육도 그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